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 금년도 세제개편(안) 포함 -

2003. 8. 28



재정경제부

www.mofe.go.kr

보고 순서

I. 재정 전망

II. 조세 환경

III. 조세정책 방향

IV. 금년도 세제개편(안)

1. 재정 전망

I. 재정 전망

세입 전망

- 국세수입 : 경상성장률 + α
- 세외수입 : 큰 폭 감소
 - * 공기업 주식매각 완료 등

세출 소요

- 국방비, 사회복지비, 국채이자 등 경직성 경비 증가
- 동북아중심, SOC, R&D 지원 필요

□ 세출소요 증가가 경상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경우
세입으로 뒷받침 가능

	'04	'05	'06	'07	'08
경상성장률(%)	8.0	7.7	7.4	7.3	7.4
세입증가율(%)	2%대	8.3	8.9	8.4	8.5

II. 조세 환경

- 조세부담률의 추가 인상 한계
- 조세형평성 요구 증대
- 조세효율성 제고 필요
- 자주적 지방재정 확충 필요

조세부담률의 추가 인상 한계

□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체감될 때 까지는
조세부담을 현 수준 보다 더 높이는 어려움

	<u>'98</u>	<u>'02</u>
• 조세부담률	19.1%	22.7%
• 국민부담률	22.9%	28.0%

* 외국의 부담률('01)

	<u>미 국</u>	<u>일 본</u>	<u>영 국</u>	<u>프랑스</u>	<u>OECD</u>
조 세(%)	22.7	17.2	31.0	28.9	28.5
국 민(%)	29.6	27.1	37.4	45.4	38.6

조세형평성 요구 증대

□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조세형평성 요구 급증

□ 소득종류간 · 계층간 과세형평성 미흡 ('02)

- 과세자 비율 : 근로자중 58% > 사업자중 47%
- 부동산과세비중 : 거래단계 71% > 보유단계 29%*

* 외국의 예

독일 64% 영국 79% 일본 83% 미국 98%

조세효율성 제고 필요

□ 국제적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심화

- ➡
 - 경쟁국보다 높지 않은 세율 유지
 - 납세협력 · 징수비용 축소할 필요

	<u>한 국</u>	<u>싱가폴</u>	<u>홍 콩</u>	<u>중 국</u>	<u>OECD</u>
법인세율(%)	27	22	16	30	29.8

□ 감면제도의 기득권화로 세입기반이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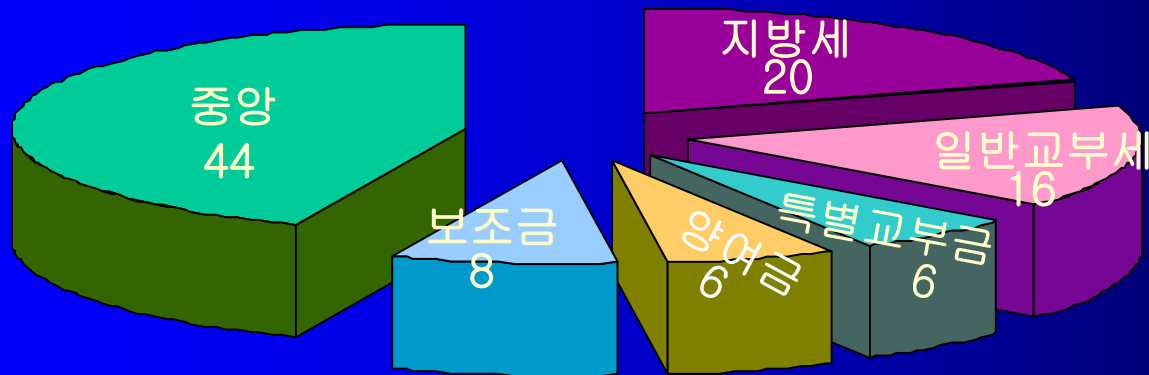
* 관련 국세 110조원 중 14조원 (13%)이 조세감면, 일본 3.8%

➡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 체제로의 전환이 어려움

자주적 지방재정 확충 필요

□ 조세수입 : 국세 / 지방 (80:20)

□ 가용자원 : 중앙 / 지방 (44:56)



□ 지방의 자율적 사용에 한계

III. 조세정책 방향

- 세입기반 확충
-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조세의 효율성 제고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원
- 국민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
- 향후 추진일정 : 로드맵

기본방향

□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 · 감면 축소

□ 형평성 제고

- 보유세 강화와 과표양성화

□ 효율성 증대

-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

□ 지방재정 확충

- 자율성 · 투명성 제고

□ 신뢰받는 세정

- 지식 정보화에 걸맞는 납세체계

세원간 적정 조세부담

❑ 기업투자소득·근로소득세
지속 인하



국제경쟁력 강화

❑ 부동산 등 재산과세 강화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소비과세는 현재수준 유지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1. 세입기반 확충

□ 조세감면 축소

- 비과세 · 감면 지속 축소 · 단순화
→ 낮은 세율 체제로의 기반 마련
- R&D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농어민 · 근로자 중산서민층 지원은 지속

□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 현금영수증카드 제도 도입
- 고액 현금거래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폭 점진적 확대

□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 비과세 · 분리과세 축소 → 종합과세 기반 확대
 - * 개인저축 중 비과세 · 저율분리과세 저축비중 : 62%
-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점진적 하향조정
- 확정금리상품 보다
주식 등 투자위험이 큰 저축상품을 세제상 우대

2. 조세의 형평성 제고

□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추진

- 지역간·재산종류간 과세 불형평 시정
- 전국 부동산을 합산,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해 중과

□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산으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3. 조세의 효율성 제고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

- 법인세율 : 과세기반 확충과 함께 중장기 추진
- 근로소득세 : 자영자 과표양성화에 맞추어 적정 관리
- 소비세 :
 - 부가가치세율 현행수준(10%) 유지
 - 특별소비세 점진적 축소·폐지
 - 에너지·주류 세금은 환경친화·소비억제 기능 강화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투자활성화 지원과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 여성의 출산과 보육 지원

□ 합리적인 기업과세제도 구축

■ 연결납세제도 도입

* 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과 조화

■ 파트너쉽(Partnership) 과세제도 도입

: 지식기반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

■ 톤세제도 도입

: 국내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 톤세 = 선박 톤수 × 운항일수 × 톤세율

4.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원

□ 지방재정 지원방식의 효율화 · 투명화

- 교부세 지원방식 단순화 · 투명화
- 지방양여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국고보조금은 관련 사업과 함께 지방에 이양

□ 지방의 신세원 개발 : 관광세, 간판세 등

□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모색

5. 국민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세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 전자세정 구축으로 편리한 납세서비스
- 어린이 납세교육 등 납세의식 개혁
-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

향후 추진일정(로드맵)

세입기반 확충

'03

'04

'05

'06

'07

□ 조세감면 축소

지속추진

□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법령개정

지속추진

□ 고액 현금거래 국세청 통보

임기내 추진

□ 금융소득과세 개선

- 비과세·분리과세
저축 축소

지속추진

- 종합과세 기준금액
점진적 하향 조정

임기내 추진

조세의 형평성 제고

'03

'04

'05

'06

'07

❑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추진

사전준비

법령개정

지속추진

❑ 부동산 실거래가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개정

지속추진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법령개정

지속추진

❑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지속추진

조세의 효율성 제고

'03

'04

'05

'06

'07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 기업 세율 인하

임기내 추진

• 근로소득세율 인하

임기내 추진

• 소비세율 적정화

사전준비

법령개정

지속추진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법령개정

지속추진

'03

'04

'05

'06

'07

□ 여성의 출산과
보육 지원

법령개정

지속추진

□ 기업과세제도
합리적 개편

• 연결 납세 제도

사전준비

법령개정

지속추진

• 파트너십 과세제도

사전준비

법령개정

지속추진

• 톤세제도

사전준비

법령개정

지속추진

'03

'04

'05

'06

'07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원

사전준비

법령개정

지속추진

국민의 신뢰받는
세정 구현

지속추진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비전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세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뒷받침

IV. 금년도 세제개편(안)

- 여건과 기본방향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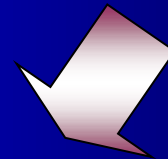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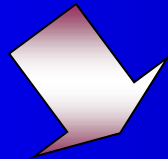
금년도 세제개편 여건

경제 여건

- 설비투자자와 소비부진
- 세계경기 회복 지연

재정 여건

- 세출소요는 지속 증가
- 세입여건 다소 불안정
 - * 세외수입 크게 감소



세수감을 크게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

기본방향

□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추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투자활성화 지원과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등

■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

■ 농어민·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지원

■ 여성의 출산·보육 지원

■ 세원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편의 증진

'03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근로자관련 세금은 이렇게 바뀝니다.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기조치)

* 세부담 경감규모 : '03년도분 △3,700억원, '04년도분 △7,400억원

□ 대학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확대(500만원→ 700만원)

■ 공제한도를 이공계대학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현행 : 연150만원)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 의료비는 한도없이(현행 : 연 50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초과 → 5% 초과

□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월 5만원 → 10만원)

□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한도 확대
: 240만원→400만원
- 대주주등의 우리사주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 소득금액의 10%→30%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3%→7%)

- 직장내 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종업원 기숙사 등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사용액의 25%) 신설

□ 신용카드·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 20% → 15%
- 직불카드*·지로납부금액 : 30% → 25%

* 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농어민 관련 세금은 이렇게 바뀝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 민박, 음식물·특산물 판매 추가(연 1,200만원 이하)

* 전통주 제조·판매 소득도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경운기·비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년 연장('03년말 → '05년말)

□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 5년 연장('04.6월 → '09.6월)

□ 농·수협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자 비과세제도가 과세로 전환('04년 : 5%, '05년부터 10%)

* '94년 세법개정으로 '97년부터 과세전환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적용 유예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12%→10%)
- 중소기업의 R & D 투자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허용
 - * 대체투자 : 노후된 설비를 생산능력이 유사한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
- 벤처기업 M & A 활성화 지원
 - 주식교환방식 M & A시 양도소득세를 이익실현시까지 과세이연
 -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몰시한 3년 연장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3%)
 -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임주기업 세액감면제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10~30%) 폐지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경감
시한 3년 연장('03년말 → '06년말)
-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 리모델링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10%→20%)
 - *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기업(대기업 포함) 관심사항 입니다.

- 대기업의 R&D비용중 석·박사 인건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시한 3년 연장('03년말 → '06년말)
-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한시적 조정
(기준내용연수 25%가감→50%가감)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개인투자금액 3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3% → 7%)
- 부가가치세 과세단위를 사업장단위에서
사업자단위로도 가능케하고 총괄납부요건을 완화
 - *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업무중복과 비효율을 축소하여
비용 절감
-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2%)을 개인과
동일하게 1%로 인하
- 대기업 기술이전소득 50% 세액감면 폐지
-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축소(2%→1%)

□ 비용인정 지출증빙 보관의무 기준 강화

: 건당 10만원이상 → 5만원 초과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하여는

과다신고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제한

: 환급세액을 5년간 납부세액과 상계

외국인투자 관련사항입니다.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 지원 대상 확대 (예 : 제조업 5천만불 이상 → 1천만불 이상)
- 지원 폭은 합리적으로 조정(10년 → 7년 또는 5년)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외국인 임직원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 (총급여액 × 17%) 납부로 과세종결방식 선택가능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시한 3년 연장('03 말→'06 말)

□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25일→50일)

□ 외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여성의 출산과 보육 지원입니다.

□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제도 확대

■ 대상 : 여성근로자 → 모든 근로자·사업자로 확대

■ 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영·유아 보육비(유치원비) 공제한도 확대

■ 한도 : 연 150만원 → 연 200만원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한도 : 월 10만원)

□ 직장내 보육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3%→7%)

국민 모두의 관심 사항입니다.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 직계존속 기준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을 55세로 통일
 -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
- 부동산 단기 양도에 대한 과세강화
 -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 36%→50%
 -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 9~36%→40%
-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7년→10년이상 가입)
- 고액복권당첨소득(5억원초과) 원천징수세율 인상 : 20%→30%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 간편화

【현행】 3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24개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

【개선】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임대시에는 과세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

-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 2천만원이상 서화·골동품 ('04년부터 과세)
- 장기보유자가 우대되는 과세체계 마련
 - 10년 미만 : 양도가액의 3%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종합과세
 - 10년 이상 :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종합과세

□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 3년 연장
(’03년말 → ’06년말)

* ’07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

□ 고속철도(’04.4월 개통 예정) 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탈세제보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포상금 지급

납세편의 관련사항입니다.

□ e-Tax(전자신고·납부) 조기정착

- 전자신고 대상 세목 확대 : 간접세 위주 → 전 세목('05년까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 세무신고서식을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정비
- 전자민원처리 확대
* 현재 230종 민원서식중 106종이 전자민원
- 근로·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 허용

금년도 개정 법률 및 추진일정

□ 개정 대상 법률(8개)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교통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기본법

□ 추진일정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8. 28 (목)
- 차관회의 : 9. 18 (목) 예정
- 국무회의 : 9. 23 (화) 예정
- 국회제출 : 9. 29 (월) 예정